

한 총리, 국회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촉구

고위당정 “국회, 국민 삶과 먼 논쟁 계속”

재난기본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열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통화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대형 인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회자가 없는 행사 사고

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때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법률도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관련 업계 상생을 목표로 합의했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영업 휴무일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좀 가속화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안전인행전산망 오류 개선대책과 중대재해처

벌법 개선 방안,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생생적인 국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전대책 및 복지 지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동절기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료들도 이러한 민생의 현장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노력을 좀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광주시의회, Y프로젝트 예산 일부 삭감

예산 67억 원 중 22억 원 삭감 의결

민선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이자 그랜드비전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사업의 첫 예산 중 수 십억원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2024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가 편성한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 67억 원 중 22억 원(32.8%)을 삭감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4개 사업으로 영산강 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 원), 서봉수상레저기반 조성(3억 원), 송산 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 원), 영산강 도심 생태숲길 조성(6억 원) 등이다.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12억 원)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12억 원) 등은 국비 매칭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편성액 그대로 통과됐다.

채은지, 박필순 의원 등 상임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3700억 원대

대형사업임에도 투자심사 절차를 건너뛰어 예산부터 편성한 절차적 문제와 일부 체험, 물놀이시설의 사업성 부족을 문제삼았다.

또 하상여과수(강바다 지하 모래층 아래의 물) 개발공법을 통한 적정 유량(1일 10만t) 확보 문제, 수질 개선과 취수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미흡한 용역보고서, 역대급 재정난도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오는 11~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Y프로젝트의 Y는 영산강·황룡강 합수지점을 형성한 모양으로, 광주시는 “상생의 영산강 시대, 골쎄도시 광주를 건설하겠다”며 맑은물, 익사이팅, 에코, 연결 등 4대 핵심전략, 20개 사업을 발표할 상태다.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이 행정적, 환경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국립의대 유치 힘찬 응원’

전남 청년, 나주서 한마음대회

전남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 서포터즈들이 국립의과대학교 전남 유치를 힘차게 응원하고 청년 간 소통강화를 다짐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 국민체육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남 청년 서포터즈 한마음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남 청년서포터즈단이 주최하고 전남도 청년센터·전남도가 주관한 행사에선 ‘국립의과대 전남 유치 퍼포먼스’, ‘청년·소통 네트워크 강화’,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호남청년 아카데미 원우회원들은 연말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이웃사랑도 실천했다.

특히 청년회원들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의대 전남 유치를 지지하는 유치 추진 캠페인을 힘차게 진행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에서 의과대학교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분류된다.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서삼석·이병훈 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 원쪽),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 및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원내대표가 수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쟁이 아닌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질의에 담았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4년 연속 농업인·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이후 임기 중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사유화와 국악방송의 국정홍보 행사 민간기업 협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 현장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국립 전남 유치를 지지 힘

전남 청년서포터즈들 ‘국립의대 전남 유치’ 퍼포먼스

전남 청년 서포터즈들이 지난 2일 나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전남 청년 서포터즈 한마음 대회’에서 국립의과대학교 전남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 청년 서포터즈들이 지난 2일 나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전남 청년 서포터즈 한마음 대회’에서 국립의과대학교 전남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선거비용 최다는 ‘광주 동남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광주 2억3600여 만원 최다·전남 3억8000여 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8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 최다 선거구는 동구·남구를 2억3600여 만원, 최소 선거구는 서구을로 1억73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0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 최다 선거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으로 3억8000여 만

원, 최소 선거구는 여수시을로 1억83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3600여 만원, 비례 국회의원 선거는 3억9400여 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

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우리 군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지상 30cm 물체도 식별

지난 2일 새벽 우리 군이 최초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1호가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하며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12월 2일 새벽 3시 19분경(미 현지 기준, 1일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 위성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 과정인 국내 지상국과의 교

신은 발사 이후 6시간28분 뒤인 9시 47분경에 이뤄졌다. 최종 단계인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모든 절차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자체 힘으로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망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정찰위성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도 식별 가능한 서브미터급인 만큼, 북한 군이 확보한 최신 무기를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탑재된 로켓이 2일 새벽 03:19(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 변질”

“온갖 흠 썰이고 썰인 민주당에 희망·꿈 접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당이 사당화되고 강성 지지층(개팔) 중심으로 변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탈당문을 통해 “오늘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흡가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4년 정치에 입문할 때의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며 “그 이후 현재 5선에 이르기까지 나를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고 떠올렸다.

이 의원은 “저는 그동안 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

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개팔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뽕충 등 온갖 흠이 썰이고 썰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미래 정치 열망 담은 연합 만이 위기 극복”

용혜인, 광주서 첫 의정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직접 제안한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에 대해 “대한민국의 복한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미래를 열어갈 정치를 만들 담대한 연합의 기회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위기 원인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에 있다. 위기에 처한 정치의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기 극복 전략은 없고, 전략 공백을 정치 검찰과 공산 전체주의 등이 기형적으로 채우고 있다. 대통령의 철학을 모르니 퇴행이 어

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어 국민들은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 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 개혁연합신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 의원은 “개혁에 대해 최소한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폭넓게 모여 함께 토론, 미래상을 실현할 구체적이고 선평한 비전을 국민에게 솔직하고 책임 있게 제시하는 제안이다”며 “개혁·변화 열망이 분출하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합집산에만 열 올리는 선거공학 세력들을 밀어내야 한다”라고 했다.



“노조법·방송3법 거부권은 민심 외면...강력 규탄”

광주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노동조합법 2·3조와 방송 3법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맹비판했다.

민중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 99개 단체는 지난 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이 지난 20년간 처절하게 외쳤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로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정권의 장악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노조법 개정 논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다”며 “윤 대통령은 시대 요구와 민심을 외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했다.